

보도시점 (전매체) 12.17.(수) 브리핑 시작시점(14:00)

2026년도 중소기업부 업무보고,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총력

- 4대 과제로 ① 활기찬 소상공인, ② 창업·벤처 활성화, ③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④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7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도 중소기업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과제로 ①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②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③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④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제시했다.

[‘25년 추진 실적·성과]

장·차관 64회 현장 간담회 결과를 정책에 즉시 반영

1. 소상공인 소비촉진으로 민생경제 회복

부처별로 진행됐던 소비 촉진 행사를 최초로 통합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10.29~11.9)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상생페이백’(9~12월)으로 1.1조원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5월 이후 3차례)로 1,124만명에게 766억원을 돌려주었다. 이를 통해 총 14.1조원의 소비를 촉진하여 ’25년 3분기 민간 소비가 3년만에 최대로 전기 대비 1.3% 증가하고, 소상공인 BSI 등 체감지표도 개선되었다.

2. 멈춰있던 혁신 엔진 재가동

12월 1일부터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10일 만에 512개사의 경영·세무 등 고민을 접수하고 94%를 즉시 해결하였다. '26년 중소기업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 편성하였으며, '35년까지였던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외 여건 개선과 정부 정책 노력에 힘입어 '25년 3분기 벤처투자액은 팬데믹 이후 최대 실적인 4조원을 기록하였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15개 수출애로신고센터를 가동하여 2,313건의 애로를 상담하고, 이 중 937개사에 1,899억원의 정책자금·바우처 등을 연계 지원하였다. 여기에 K-뷰티·푸드 등 인기가 더해져 '25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04억달러, 대(對)미 수출은 4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 대·중소기업 공정·상생 기반 마련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였다. 올해 1~11월 상생결제액이 역대 최대치인 169조원을 달성하였으며, ‘상생결제’ 활용 세제혜택 일몰을 연장하였다.

[향후 업무추진방향]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총력

1.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

중소기업 성장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성장 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2. 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지원

지역 할당, 지원을 상향, 지역 전용예산 확대 등 중소기업 정책을 지역에 집중하여 재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을 확대하여 기업과 생활, 문화 등이 결합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3.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혁신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AI를 기반으로 정부·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화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평균 9개 → 4.4개)

중기부는 앞으로 모든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에 위의 3가지 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4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4대 추진과제]

1.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1)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개사 발굴하고, 1천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로컬 창업타운’(2개소)을 통해 교류·협업 등을 지원하고 로컬창업의 지역 지원 비중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K-컬처·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하여 전국에 '30년까지 글로벌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하고, 조례제정·상생협약을 확산하여 소상공인간 조직화·협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2)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보

'25년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했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26년에는 지역·대기업·외국인까지 어우러지는 '글로벌' 행사로 추진한다. K-POP, 지역 관광 등과 연계하여 내·외국인이 모두 찾아오는 글로벌 상권·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업종·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무신사,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 3,500개사의 온라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데이터·디지털 기반 선제 대응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는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폐업 시 6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노동부와 연계 지원,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상권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4조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금리를 0.2%p 우대할 계획이다.

2.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1) 국민·청년·재도전자 등 '모두의 창업' 시대 개막

오디션 방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창업루키를 年 100명 선별하여 창업·투자를 연계 지원한다.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 대상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재부와 논의하고,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하여 국내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도전 응원본부'를 본격 운영하여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보증, 융자, 펀드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대상도 현재보다 폭넓게 규정할 계획이다.

(2) 지역 창업·투자를 수도권 수준까지 확대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26년 5곳, '30년까지 10곳을 조성하여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부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까지 집중 지원한다.

- * ①인프라 : 창업스타트업파크 5곳, 투자 14개 시·도별 엔젤투자허브(現 4곳) 조성
- ②인력 : 창업중심대학 확대(11 → 17곳), 신규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3곳) 지정
- ③사업화 : TIPS 지역 50% 우선 할당, 지역 스타트업 전용 사업화 지원(122억원)
- ④네트워킹 : 권역별 '지역창업 페스티벌' 릴레이 개최(年 12회 내외)
- ⑤정주여건 : 주거·교통·문화 등 범부처 인재 유치 기능 연계(지방시대위 등 협업)

'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를 총 3.5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참여 지방정부·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라인·해외로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 퇴직인력, 선배 기업가 등 1,60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3) 모험투자자가 이끌어가는 벤처투자 40조원 시대 개막

연기금·퇴직연금, 금융권 및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세제를 개편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한다.

전년 대비 58% 증가한 1.6조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로 공급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4)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성과 창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개시하여 AI·딥테크 스타트업에 최대 1천억원의 투자·보증을 집중 지원한다. 잠재 유니콘에 6~16억원의 대규모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美 UKF와 같은 해외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와 'K-파운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3.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1)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30년까지 1.2만개 구축한다. 내년은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분야의 스마트공장 585개, 삼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30년까지 500개사에 사업화·R&D·컨설팅 등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7개 지방정부(기존 5개+ 신규 2개)와 함께 추진한다.

(2) 확대된 R&D 예산을 '돈이되는 R&D'에 집중 투자

VC의 투자를 받은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年 1,2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사업)을 도입한다. 신설되는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500개 과제)는 기획 단계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의무화하고, R&D 우수 성과기업 160개사에는 최대 1.5억원의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3)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소비재 분야 수출 확대

K-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을 1~2곳 발굴하여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소비재 수출 전략품목을 '26년에 180개, '30년까지 500개를 발굴하여 수출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고 입점·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K-온라인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바우처, 컨설팅·기획전 등을 지원한다. 민간 검증을 거친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을 5개사 내외 선정하여 리뉴얼, 해외 법인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노력한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1)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확충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금융, R&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한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공정위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비용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상생하며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조성

수·위탁을 넘어 금융회사·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공유제’ 대상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개사로 확대한다. 사업영양보호 등 상생협약의 준수 의무를 상생협력법에 명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산, AI, 기후테크,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대·중견 기업과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한화오션 등 대기업과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고, 외교성과로 GPU를 확보한 SK·네이버 등과 분야별 AX 챌린지를 개최하여 AI 스타트업의 초기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루었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하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진수웅 (044-204-7420)
		담당자	서기관	김승택 (044-204-7422)
			사무관	김건영 (044-204-7470)
			주무관	김은성 (044-204-7437)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중소기업 10대 정책


- 


①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 10,000개사 발굴하고, '로컬 기업가' 年 1,000개사 육성
- 


② 대규모 할인 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지역·외국인·대기업이 아우러지는 글로벌 행사로 확장
- 


③ 300만 대출 보유 소상공인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정책자금 3.4조원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등 배정
- 


④ 오디션 방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창업루키 年 100명 선별
- 

⑤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26. 5곳 → ~'30. 10곳)
- 

⑥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대폭 확대 ('25. 1조원 → '26. 1.6조원, +58%) 및 민간 벤처투자 참여 촉진
- 

⑦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 1.2만개 구축 ('26. 1,285개 → ~'30. 1.2만개)
- 

⑧ TIPS 프로그램 확대(850 → 1,200개사),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사업) 신설 등 '돈이 되는 R&D' 집중 투자
- 

⑨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 K-부티 수출거점 지역(1~2곳) 발굴
- 

⑩ 수·위탁을 넘어 금융사·온라인플랫폼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실시